

“전쟁통이 따로 없어요”...주말 앞두고 점주·알바 ‘긴장’

밤 10시 영업제한 ‘풍선효과’...편의점 내부는 복세통 공원·야외 술판 수십명 ‘다닥다닥’ 현장 계도 수준 한계

“평일·주말할 것 없이 긴장의 연속이 예요. 밤 10시만 되면 어디선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전쟁통이 따로 없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영업제한이 이뤄지면서 편의점 점주와 알바생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술집과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편의점으로 몰리는 이른바 ‘편의점 풍선효과’ 탓인데, 수개월째 반복

되고 있어서다. 특히 갈수록 편의점을 찾는 이들이 늘어가면서, 짧은 시간에 수십여명이 집중돼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공원·노상 술판으로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 확산의 단초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3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27명, 1일 25명, 2일 22명, 3일 13명, 4일 14명, 5일 16명, 전남 13명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히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식당·술집 등 밤 10시 영업제한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편의점 풍선효과’도 계속되고 있다.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 편의점의 경우, 밤 10시-11시 사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복세통을 이루는데다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테라스에는 매일 만석을 보이고 있다.

광주 한 번화가 일대 편의점 점주 A씨

는 “밤 10시가 넘으면 전투태세에 돌입하고 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십여명이 찾아오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규모가 큰 편의점인데 계산대부터 입구까지 줄지어 서는 등 매일 장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끔 만취한 취객들이 실내취식이 안되는데도 때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참 난감하다”면서 “편의점을 찾는 이들 가운데 확진자가 있을까 우려스럽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도 있어 불안하다”고 걱정했다.

인근에 또다른 편의점 알바생 B씨는 “평소 다른 시간에는 사람이 없다가 밤 1

0시만 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몰려들어서 주간으로 시작을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대부분 술에 취해 오는데, 막 말을 하거나 새치기를 해 불편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 편의점 밤 10시는 전쟁통이 따로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코로나 장기화로 ‘편의점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어 점주와 알바생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계다가 강력한 거리두기가 지속된 탓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여 도심 곳곳 공원과 야외 공공장소에서 술판을 벌이는 ‘야외 술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삼삼오

오 모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돼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계도 조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야외에서 술판을 벌이다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면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야외 음주를 자제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야외 잔디밭을 방문해 술판을 벌인 2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수기자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광주 북구가 2021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7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전기·소방·기계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관리기관 관계자들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무대 조명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김영근기자

광주·전남 ‘긴급차량 우선신호’ 설치 ‘0곳’

한병도 “지역별 편차 커...골든타임 확보 등 확대 도입 필요”

소방차량 출동 시 사용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광주·전남에는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 시도본부별 현황’을 보면, 광주·전남지역에는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었다.

경기도가 3천362개로 제일 많이 설치됐고, 이어 울산 30개, 강원 27개, 경남 19개, 대전·창원 18개, 경북·세종 17개, 제주 13개, 충남 8개 순이다.

전국 18개 시도본부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8개 시도본부에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활용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소방청이 119안전센터의 소방대원 2천477명을 상대로 우선신호시스템의 전국 확대 적용 필요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1천987명(80.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 의원은 “소방차의 골든타임 도착을 좌우할 수 있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아예 없는 곳이 있거나, 있더라도 지역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소방청은 우선신호 시스템이 전국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화재나 재난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즉, 차량의 위치를 GPS로 추적해 교차로 진입 시 자동으로 신호등에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긴급차량이 교차로 통신영역(약 100M)에 진입했을 때, 긴급차량의 신호를 부여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83%는 ‘정부기관 사칭’

검찰 사칭 가장 많아...‘대출 빙자형’ 17%로 낮아져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 관련 정부 발 문자 안내가 많아지면서 올 상반기 중 일어난 보이스피싱 피해의 83%는 ‘정부기관 사칭형’ 범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유형 중 만년 1위였던 ‘대출 빙자형’은 올해 급격하게 비중이 낮아져 17%로 그쳤다.

국회 정부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계좌 1만4천65건 중 정부기관 등 사칭형이 83.4%인 1만1천732건으

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 5만13건 중 15.4%인 7천712건이었다. 이후, 2018년 21.7%, 2019년 22.4%, 2020년 43.2%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 상반기 1만1천732건으로 83.4%를 차지해 처음으로 대출빙자형을 넘어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검찰이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칭기관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에 의하면 올해 8월말 기준, 검찰을 사칭

한 보이스피싱이 3천283건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찰 287건(6.1%), 금융감독원 25건(5.5%) 순이었다.

반면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17년 전체 피해건수 5만13건 중 4만2천301건(84.6%)을 차지한 이후 2018년 78.3%, 2019년 77.6%, 2020년 56.8%로 감소하다가 올 상반기 2천333건으로 16.6%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정부발 실제 메시지의 신뢰도마저 저하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각별한 단속과 처벌로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검찰, ‘6억대 뇌물’ 前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사법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남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억700여만원

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정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전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 가로등 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본부장에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수기자

‘선거법 위반’ 시의원, 항소심서도 직위 상실형

광주고법, 벌금 200만원 선고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광주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

환 고법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 광주시 의원의 항소심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면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일 오후 6시55분부터 8시15분 사이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교회 2곳의 목사와 교인 등 18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조오성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조 후보와 함께 이 식사 모임에 참석했다.

/김동수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외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